

2030 젊은 층이 원숭이 무리로 보이나

홍익 칼럼



정창웅
논설주간

출산을 하라 속도가 가파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8까지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2020년엔 0.84였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다. 산술적으로 출산율이 최소 2.0은 돼야 인구를 유지할 수 있다. 2020년 출산율이 1 이하인 나라는 유엔 198개국 중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이런 나라가 지속 가능할 리 없다. 영국 옥스퍼드 인구문제연구소가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로 한국을 꼽은 이유다.

이뿐만 아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빨리 늙어간다. 노인인구가 초고속으로 늘고 있다. 2018년 '고령사회'(고령인구 비율 14%)에 들었는데 2025년이면 '초고령사회'(20%)로 넘어간다. 인구절벽이 세계에서 가장 심각하다는 일본이 12년, 독일이 37년

걸린 길을 7년 만에 간다. 격정거리라는 현 2030세대가 은퇴할 2060년이면 이 비율이 43.9%까지 치솟아 세계에서 가장 심각하다는 점이다. OECD의 '한눈에 보는 연금' 보고서는 더 비관적이다. 2060년 생산 활동을 하면서 세금을 낼 20~64세 인구가 한국에서 사실상 반 토막이 난다. 2065년이면 생산가능인구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나라가 된다. 이마저도 현재 0.8 전후인 출산율을 2040년까지 1.25로 끌어올린다는 낙관적 가정 아래서다.

지금도 한 해 태어나는 아이는 30만 명이 안 되는데 생산가능인구에서 노령인구가 편입되는 국민은 85만 명에 달한다. 세금 낼 국민은 줄고 세금 쓰는 노인은 급격히 늘고 있다. 경제성장이라도 잘되면 다행이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경제성장률도 OECD 평균 이하로 떨어졌다. OECD는 2030~2060년 한국 잠재성장률이 0.8%로 OECD 꼴찌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런 나라에서 2030의 장래는 녹록하지 않다. 당장 2030의 은퇴가 시작될 2057년이면 국민연금에 고갈된다. 한 국경제연구원은 그 시기를 2055년으로 앞당겼다. 2055년에 국민연금 수령 자격이 생기는 1990년생부터 적립된 국민연금을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다.

이는 현 세대가 혜택을 누리자고 미래 세대에 부담을 떠넘긴 결과다. 그런

데도 대통령 후보들은 2030 표심을 잡겠다며 청년들에게 현금을 쥐여주겠다는 약속만 쏟아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사탕발림은 압권이다. 만 19~29세 청년들에게 연간 100만 원씩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나섰다. 700만 청년들에게 지급하자면 한 해 7조 원씩 들어간다. 2040년이면 국민 한 사람이 내야 할 세금이 지금의 3배, 2050년이면 5배까지 급증할 것이고, 2030세대들이 그 세금 폭탄을 떠안아야 한다는 말은 하지 않는다.

설상가상 올해 태어나는 국민은 고등학교를 졸업할 즈음인 2038년이면 줄어들 1인당 나랏빚이 1억5022만 원, 2047년이면 2억 원을 훌쩍 넘게 된다. 올해 1천조 원을 넘긴 빚이 두 배인 2천조 원을 넘기는 데 8년이 걸리지 않는다. 알뜰한 현금을 미끼로 미래 세대에 거대한 독박을 씌우는 것이다.

이에서 중국 고사성어 '조삼모사(朝三暮四)'를 떠올린다. 송나라 저공이 원숭이들을 모아 놓고 "아침에 세 개, 저녁에 네 개씩 도토리를 주겠다"고 하자 원숭이들이 화를 냈다. 저공은 할 수 없다고는 듯 "그럼 아침에 네 개, 저녁에 세 개를 주겠다"고 말을 바꿨다. 그러자 원숭이들이 좋아했다는 고사성어다. 당장의 표를 위해 대선 후보들이 2030 젊은이들을 원숭이 무리쯤으로 보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한다.

사설社說

이재명 후보 주택 311만 호 공약이 비판받는 이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3일 경기도 의왕시에서 문재인 정부의 주택 206만 호 공급 계획에 서울 48만 호, 경기·인천 28만 호, 타 지역 29만 호 등 105만 호를 더해 "총 311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의 역대급 부동산 공약에 상당수 국민들은 "공으로 메주를 쏜다고 해도 안 믿는다" "차라리 3천만 호를 공급한다고 해라"며 비판하고 있다. "311만 호 공급하겠다니 진짜 311만 호라고 생각하는가 봐"라는 비아냥거림까지 나오는 지경이다.

이 후보의 공약이 호응은커녕 격한 비판을 받는 것은 그의 처신 탓이다. 주택 공급과 관련, 그는 지난해 8월 민주당 당내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에서 문 정부 공급 계획(206만 호)을 훨씬 상회하는 250만 호를 지겠다고 밝혔다. 그래도 부동산 관련 여론이 싸늘하자 불과 5개월 만에 61만 호를 더 얹은 것이다. 실현 가능성, 효용성을 면밀히 검토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이 후보는 지난 11일 신경제 목표

라며 '555 성장 공약'을 내놓았다. 코스피 5천 달성, 국민소득 5만 달러, 종합 국력 세계 5위를 달성하겠다는 말이었다. 이에 경제전문가인 윤희숙 전 의원은 "임기 내 국민소득 5만 달러를 달성하려면 매년 한국 경제를 8%씩 성장시켜야 한다. 지금 잠재성장률이 0.8%다. 8% 성장은 불가능하다. 비약적 경제성장이 어려우니 코스피 5천이나, 종합 국력 세계 5위도 뜬구름 잡는 소리"라고 직격했다.

이 후보는 '기본소득'과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밀어붙이더니 후퇴했다. 그랬다가 다시 "포기할 바는 없다"고 했다. "음식점 허가 총량제" "전환 경제는 잘못" 등의 발언도 비판을 받자 발을 뺐다.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했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고 했다. 무엇이 진짜 공약인지, 나라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겠다는 것인지 종잡을 수 없는 것이다. 민주당은 한발 더 나가 그런 태도를 '유연성'이라고 해명한다. 대책 없이 말부터 꺼내 놓고 비판에 부딪히면 말을 바꾸는 것이 유연성인가.

文 정부 일자리 정책 실패, 대선 후보들 반면교사 삼아야

좋은 일자리로 꼽히는 풀타임(full time·주 36시간 이상 근무) 일자리가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185만 개나 사라졌다. 감소율이 8.4%나 된다. 풀타임 일자리가 가장 많이 준 업종은 도·소매업(67만4천 개), 제조업(35만3천 개)으로 나타났다. 문 정부가 초래한 고용 참사의 민낯이 다시금 확인됐다.

코로나19 사태 탓도 있지만 좋은 일자리 격감은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일자리 정책 방향을 잘못 잡은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집권 초 "일job을 만드는 게 기업의 몫이라는 고정관념을 버려라"고 강조하고, 정부에 일자리를 만들 것을 지시했다. 이렇게 5년간 쏟아부은 정부 일자리 예산이 120조 원을 육박한다.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풀뿌리, 전 등 끄기, 휴직 풀기 등 세금 알바 일자리가 속출하고, 공무원 정원을 11만 명 더 늘렸다. 반면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주역인 기업에 대해서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친노조 정책 등으로 과중한 부담을 안겨줬다.

좋은 일자리가 대폭 감소한 대선 주 36시간 미만 근무하는 시간제 일자리는 문 정부 4년 동안 229만3천 개나 늘었다. 대통령과 정부는 세금을 들여 만든 눈속임 일자리를 앞세워 "고용시장 훈풍" 운운하면서 자화자찬을 거듭했다. 눈 가리고 아웅한다는 말이 딱 들어맞았다. 문 대통령은 지난 연말 대기업 총수들을 만나 "좋은 일자리 창출은 기업 몫이고, 정부는 최대한 지원할 뿐"이라고 했다. 정권이 끝나는 시점에서야 문 대통령이 '일job은 기업이 만든다'는 당연한 사실을 입에 올렸다. 그걸 이제야 알았느냐는 비판이 안 나올 수 없다.

일자리 공약을 내놓고 있는 여야 대선 후보들은 문 정부의 일자리 정책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기 바란다. 정부가 세금을 투입해 만든 일자리는 좋지 않고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는 것을 뇌리에 새겨야 한다. 좋은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기업을 옥죄는 족쇄들을 과감히 없애는 공약을 내놓는 데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시민 일상 스며드는, 북성로 문화 플랫폼을 기대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주춤하지만, 대구근대골목투어는 대구 관광의 아이콘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했다. 과거엔 관광 자원이라고 하면, 흔히 파라미드나 마추픽추·나이아가라 폭포·그랜드캐니언·자금성 등 거창한 문화유산이나 자연 경관을 떠올리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물론 지금도 이들이 훌륭한 세계적 관광자원인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세월의 변화에 따라 사람들의 인식도 바뀌었다. 굳이 거창한 문화유산이나 자연경관이 아니더라도, 서로 다른 문화와 환경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온 흔적과 현재 살아가는 모습 그 자체가 관광자원이 되는 시대를 맞았다. 한 때 관광 볼거리로 불리던 대구 근대골목투어를 계기로 관광도시로 부상한 것 또한 이 같은 흐름 덕분이다.

대구 중구청이 추진하고 있는 '북성로 문화 플랫폼 및 도시 브랜드 구축 사업'(향후 3년간 15억 원 투입)은 대구 도심에 또 다른 활력을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북성로 내 기록물 등 문화·예술 자산을 모으고 분류하는 기초 작업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대구의 중심부 북성로 일대는 근·현대 대구 발전의 중심지였고, 일제강점기와 6·25전쟁 등을 거치면서 대한민국의 문화예술과 사상을 이끌었던 역사적 공간이다.

특히 최근 도심 재개발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향후 2~3년 사이 '시민이 떠난 도심'에서, 시민이 모이고 함께 살아가는 도심'으로 급격히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개발로 인한 문화 유산·유적의 파괴·훼손 우려도 있지만, 근대 문화유산과 역사·정신은 시민들의 일상적 삶과 함께 어우러질 때 비로소 그 빛을 발할 수 있다. 시민의 일상에서 밀려난 박제된 문화유산은 '죽어버린 과거'일 뿐이다.

각종 도시재생사업의 결과물로 만들어진 건물, 하드웨어 등이 형체를 촉내는 골칫덩이 신세로 전락하곤 하는 것을 우리는 자주 목격하고 있다. 북성로 문화 플랫폼 구축 사업이 시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행복하게 하면서, 외지 관광객들이 대구인(大邱人)을 더욱 공감하게 하는 기폭제가 되길 기대한다.



야고부
野鼓賦

지난해 대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가 77명으로 관련 집계 시작된 1977년 이후 가장 적었다는 신문 보도가 있었다. 2020년의 103명과 비교해 25%나 감소했는데 전국 8개 특별·광역시 중 전년 대비 사망 감소율이 가장 높았다. 자동차 1만 대당 대구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0.56명으로 세종시(0.46명)에 이어 17개 시도 중 가장 낮은 것도 특기할 만하다.

지난해 대구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전년 대비 6.7% 감소하고 사망자 수가 크게 줄어든 것은 반가운 일이다. 시 당국의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을 비롯해 그릇된 운전 문화나 습관에 대한 운전자의 반성, 고령자의 운전면허증 반납도 한몫했다.

그렇지만 아직도 개선할 점이 많다. 인구 10만 명당 한국의 교통사

고 사망률은 2010년 11.1명이었다. 이후 매년 감소해 2020년 6명까지 낮아졌다. 하지만 호주 4.3명, 프랑스 3.9명, 독일 3.2명, 영국 2.3명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올해부터 관련 규정이 강화되면서 운전자 사이에 이슈가 된 '교차로 우회전' 문제도 꼼꼼이 따져볼 필요가 있다. 보행자 도로 횡단 사고와 새벽 시간 사망사고 등과 함께 관련 법규를 무시한 채 교차로 우회전을 하다 사고를 일으키는 사례가 많아졌다. 운전자 53.8%가 우회전 시 멈추지 않고 그대로 통과한다는 통계는 심각한 대목이다.

현행 교통체계상 우회전은 '비보호 우회전'을 적용한다. 그만큼 통

행 시 주의해야 한다는 말이다. 특히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는 물론 직진 또는 좌회전 신호를 받고 진행하는 차량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도로교통법에 명시돼 있다. 그런데도 이를 무시하는 운전자가 많다. 오는 7월 12일부터 보행자의 발이 횡단보도에 조금이라도 걸처져 있다면 무조건 멈춰 서야 한다. 이를 어겼다가 적발되면 범칙금과 함께 보험료가 10% 할증된다.

대구시와 대구경찰청은 2016년부터 '교통사고 30% 줄이기 비전 특별 대책'을 추진해 왔다. 또 2024년까지 1천35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교통사고 줄이기 시종3'를 계속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당국의 끈기 있는 투자와 개선 노력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운전자 개개인의 안전 의식과 준법정신이 사고를 줄이는 가장 큰 열쇠다.

서종철 논설위원 kyo425@maeil.com

우회전 유감

요가 있다. 보행자 도로 횡단 사고와 새벽 시간 사망사고 등과 함께 관련 법규를 무시한 채 교차로 우회전을 하다 사고를 일으키는 사례가 많아졌다. 운전자 53.8%가 우회전 시 멈추지 않고 그대로 통과한다는 통계는 심각한 대목이다.

현행 교통체계상 우회전은 '비보호 우회전'을 적용한다. 그만큼 통

경 남부내륙철도 성주역유치! 성주 철도시대 개막!

기차역에서 만나는 성주, 5만 성주군민의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성주군민이 이룬 위대한 역사(歷史) 남부내륙철도 성주역 유치를 축하드리며, 성주의 고품격 주거문화를 선도하겠습니다.”

테라스형 타운하우스 '성주 리버뷰 펜타시움'
(주)대성빌리시움
 대표 배 명 수